

체신부

전기통신관계법 개정안 마련

체신부는 통신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능동대처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기통신사업체계가 기간통신사업(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를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기간통신사업은 다시 일반통신사업(전신전화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제공)과 특정통신사업(무선호출등 제한된 통신서비스제공)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통신에만 부과해오던 연구개발투자출연 의무를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총매출액중 일정비율을 국책연구기관이나 단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체신부 지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일반통신사업자는 회선보유와 전용회

선의 판매가 가능하며, 특정통신회선을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된다.

또 특정인의 최대주식소유비율은 10%이내가 되며, 외국인의 주식소유는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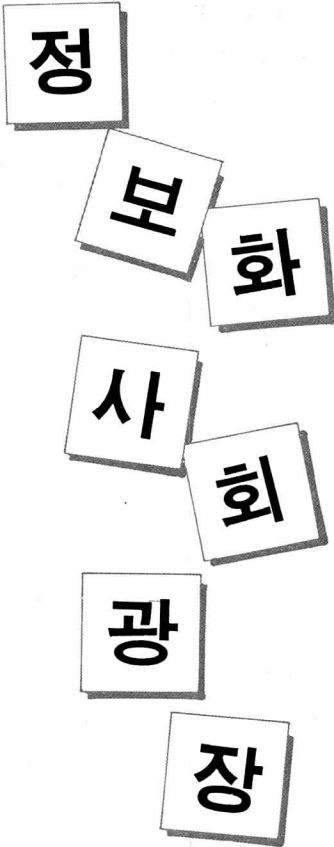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는 3%이내까지만 주식소유가 가능하고, 일반통신사업자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된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무선호출기·항만전화 등 특정통신사업자는 지정방식에서 허가제로 완화하는 한편, 한 회사의 주식 소유합계 3분의1범위내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는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을 고려,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주식소유도 1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가통신분야는 등록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은 '정보통신안테나'란 참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체신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아울러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근 체신부가 밝힌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전산망등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영과 유지보수업무를 전담하게 될 가칭 한국정보통신관리공단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된다.

이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행정·금융·교육연구망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료를 지불하고 운영과 유지보수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이 개정안에서 또 행정망·교육연구망·금융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연계·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산망관련기술 및 기기를 표준화하는 한편 전산망 관련기기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문화 확산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문화센터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정민간단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무선호출 전용망 구축

무선호출기(일명 삐삐)의 서비스요금이 훨씬 싸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동일한 번호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무선호출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적체가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식별번호(012)를 갖춘 무선호출전용망을 5월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구축키로 했다.

전용망구축계획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이 1차로 4월15일 충청·전남·전북 등 3개 지역에 전용교환기를 설치, 개통하고 5월1일에는 강원·제주지역에, 6월1일에는 서울(경기도포함)·경남·경북지역에 각각 교환기를 개통해 전용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012번만 돌리면 곧바로 무선호출전용교환망에 연결, 호출할 수 있고 시외호출시에도 시내전화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통신

전자우편서비스 실시

한국통신은 그간 한국데이터통신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전자우편서비스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실시한다.

한국통신은 「KT-Mail」로 명명된 이 전자우편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5월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의 개인용컴퓨터 이용자중 신청자 5천명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 서울과 부산에 이어 6월

중 시범사업을 대전·대구·광주·인천·전주 등 7개도시로 확대하고, 92년 7월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뒤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대상가입자로 선정된 사용자는 사용시간에 대한 전화요금만 물면 가입비나 월사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모뎀(1천2백~2천4백bps)과 에뮬레이터는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KT-Mail」서비스는 정보통신전용망을 통해 컴퓨터단말기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을 비롯 전자게시판·공개자료실·컴퓨터대화·동호회·폐쇄이용자그룹(CUG) 등 6종류이며, 이밖에 PC로 작성한 메시지를 상대방의 팩시밀리나 텔렉스로 전송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이의 이용방법은 전화선에 연결된 개인용컴퓨터에 통신용에뮬레이터를 동작시킨 후 전용전화번호인 「700-9000」을 누르면 「KT-MAIL」이라는 로고형태가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화면이 나타난다.

디지털전송망 유럽방안으로 전환

한국통신은 北美방식(T1)으로 구축되어온 디지털전송망을 첨단유럽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TDX-10」 등 디지털전자교환기의 표준규격을 마련한데 이어 PCM(펄스진폭변조) 단국장치 등 각종 디지털전송시설의 표준규격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국통신이 이처럼 디지털전송방식을 T1에서 CEPT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T1방식의 경우 24채널에 불과, 음성전송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송속도가 56Kbps로 제한되어 데이터 및 영상정보를 보낼 때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CEPT방식은 32채널의 대용량인데다 전송속도도 64Kbps급까지 초고속으로 높일 수 있어 음성정보는 물론 데이터 및 영상정보를 원활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은 우선 오는 10월에 설치되는 광화문통신센터의 시외·국제겸용교환기를 32채널의 CEPT방식으로 채택하고 늦어도 올해말까지 전용교환시설 및 전송시설의 표준규격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전송방식전환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통신업

체들도 경쟁적으로 유럽식 장비의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디오텍스 서비스 7월실시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이용을 대중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문자정보 뿐 아니라 화상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는 비디오텍스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통신은 특히 이번 비디오텍스서비스를 계기로 올해부터 96년까지 총6천억원을 투입, 3백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은 우선 6월말까지 서울 여의도지역을 비롯, 경기도 과천 및 광주지역에 1만대를 보급하는 데 이어 부산지역 등에 3만대를 무상 임대하는 등 올해안으로 총4만5천대의 비디오텍스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올 상반기 보급할 단말기 1만대에 한해서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 7월1일부터 1년동안 단말기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계획이다.

한국표준연구소

한글·한자코드 확장방안 마련

한국표준연구소는 최근 1년

여의 연구끝에 기존의 2바이트완성형 한글·한자표준코드에 혼합형 확장코드와 한글전용코드 등 2개의 코드세트를 추가, 조합가능한 모든 한글과 古語, 그리고 보다 많은 한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글·한자코드확장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산망 표준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전산망표준 코드로 활용하는 한편 KS코드로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글·한자코드 확장방안을 보면 혼합형 세트의 경우 현재 KS코드로 지정된 표준코드(한글 2천3백50자, 한자 4천8백88자, 특수문자 9백87자)에 한글 1천9백30자, 옛글자 및 한자 각각 2천8백65자, 특수문자 1천5백자를 추가로 수용한 제1보조세트와 조합가능한 모든 한글(1만1천1백72자)중 제1보조세트에 수용되지 않은 한글 6천8백92자를 집어넣은 제2보조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글전용코드세트는 표준코드에는 없는 한글 8천8백22자를 제1보조세트로 채택해 모든 한글을 수용했으며, 제2보조세트로 漢字와 古語를 수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신부는 올해안에 이

번에 마련된 확장문자에 대해 글자체(FONT)를 제작, 이를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마스크롬 실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

TDX관련 S/W기술 민간에 이전

과학기술처는 지난달 29일 체신부와 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 지난 7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전교환기 TDX의 개발과정에서 전자통신연구소가 직·간접적으로 개발해 사용한 소프트웨어와 개발도구 및 개발방법론 등 1백여개를 업계에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기술이전은 CHILL컴파일러 등 고도의 기술을 갖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물론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이달중 설문조사등을 통해 관심대상 소프트웨어와 이전방법 및 형태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 6월중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처는 이번 기술이전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에 비해서는 대폭 싸게 공급할 계획이며, 또

로열티등 이전기술의 대가는 민간기업에서 직접 받는 방안과 제조업경쟁강화대책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이전예산 항목에 3억원을 추가, 상품화한 뒤 기술료를 받는 방안중에서 택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기처는 TDX에 직접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TDX공동개발업체인 삼성·금성·대우통신·현대등의 기술보호문제를 고려, 별도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트패드 컴퓨터개발 착수

전자펜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릴수 있는 휴대용 노트패드컴퓨터의 개발이 착수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지능연구센터는 상공부·과학재단·국내컴퓨터업체등으로부터 19억원의 연구비를 공동지원 받아 94년6월까지 노트패드컴퓨터를 개발기로 확정하고 지난달 23일 오후 사업계획 발표회를 가졌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앞으로 전자펜과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필기문자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비롯해 펜을 사용한 편집기 그

리고 이러한 여러 기능을 종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진청

정보산업 표준화에 박차

공진청은 최근들어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규격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 기구 및 인력확대를 적극추진하는 한편 지난 87년에 수립, 시행되고 있는 정보산업표준화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정보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크게 부족한 예산 및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보산업표준과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산업표준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유도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87년에 마련된 정보산업표준화 중장기계획이 그동안의 기술발전예 따라 내용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안에 이를 재검토하여 다국어문자코드·멀티미디어·하이퍼미디어등 첨단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